與 '순직해병 특검' 필리버스터에도 野 "오늘 처리 예정"

野, 본회의서 특검법안 상정
與 연좌농성·필리버스터 돌입
시작 후 24시간 뒤 투표로 종료 가능

거대 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니까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野, 검사 탄핵 발의에 비판 쏟아져… '신중론' 제기

대통령실 "헌정파괴·입법폭력 쿠데타"
與·법조계, 탄핵소추 '李 방탄용' 비판
野 "중도층 피로감 느낄 수도 있어
검사들, 기소권·수사권 오남용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절차 돌입 및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상적, 반헌법적, 비합리적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의 혐의보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방탄용'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수록 지지층만 호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 관계자는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을 놔둬야 하느냐"며 "그들의 혐의는 이 전 대표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권성동 "野, 김건희 여사가 외압 배후처럼 의혹 확대·재생산"

"기획 중심에 김규현 변호사 의혹
野, 이종호-임성근 친분관계 질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 여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 공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의 '정언유착' 의혹이 파다하다"며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 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JTBC는 지난달 25일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변호사 C씨는 이종호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언급된다"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김 변호사로 추정되는데, 해당 카카오톡 캡처본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단체 대화방 보도를 언급하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뒤에서는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고,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체 대화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며 "김 변호사가 단체 대화방 캡처본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됐는지, 법사위 청문회 직후 이뤄진 단독보도가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사전 기획한 '김만배-신학림 조작 녹취록'을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이 안타까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촉구한다"며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